

대안정치연대, 평화당 탈당 선언

“세 걸집 신당 마중물될 것”
탈당계 제출 날짜는 16일로
“당직자들 위한 배려” 설명

민주평화당 내 제3세대 구축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는 12일 “제3세력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걸집시키면서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중앙당에 탈당계는 제출했으나 오는 16일자로 접수키로 했다.

대안정치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기 위해 평화당을 떠난다. 작은 강물들이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듯이 더 큰 통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행렬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안정치는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탈당은 대안정치 대변인인 장정숙 의원을 뺀 9명이 단행한다. 장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평화당에서 활동 중이나 바른미래당 소속이어서 탈당계가 아닌 당직사퇴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탈당계는 오는 16일에 접수되도록 제출했다. 15일을 기준으로 정당보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내 제3세대 구축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이 민주평화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박지원, 장병완, 장정숙, 유성엽, 천정배, 김중희, 최경환, 윤영일 의원.

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전 탈당하게 되면 평화당에 남아있는 당직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대안정치 소속 의원은 설명했다.

대안정치는 국민,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한 사과부터 전했다. 이들은 “5·18정신을 계승한 민주세력의 정체성 확립과 햇볕정책을 발전시킬 평화세력의 자금심 회복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큰 마음의 빔을 졌다. 이 빔을 갚기 위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안정치는 새로운 대안정치 세력이

온건 진보층과 합리적 보수층, 국민의 40%에 달하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세력이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발굴, 제시하는 정책정당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안정치는 외부인사를 대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인사영입이 되지 않아 유성엽 의원이 임시대표를 맡고 있다.

유 임시대표는 이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대안정치 대표로 우리의 기본적인 취지대로 외부에서 추대키로 했다. 추대가 될 때까지는 제가 임시대표를 맡고 추대가 되면 대표직을 넘

기도록 하겠다”며 “(외부인사는) 접촉하고 있고 염두에 둔 인사도 많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 아마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임시대표는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제3세대에서 함께 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도 합류 여부 등을 밝히는 어렵다고 했다.

대안정치가 창당 관련 수순을 바로 밟는지 묻자 유 임시대표는 “금명간 창당추진위를 발족해 창당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기국회 전이다 후다 논의하기보다는 가능한 빨리 창당추진위를 만들 계획”이라고 답했다.

“日 경제 보복 대응, 긴 호흡 가져야”

문 대통령, “결기를 가지되 근본대책까지 생각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 안된다”며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사해동포주의를 주창하고 실천했다”면서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 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시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

민 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흘 후면 광복절이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 깊게 다가온다”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전회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부족함을 꼼꼼하게 살피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있게 임하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헤아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日 정부 경제침략 행위 규탄”

전국시도의회협의회, 백색국가 제외 철폐 촉구
국민 극일활동 지지·피해 입은 기업 지원키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폐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전국시도의회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적 성격의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은 물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돼 있는 한국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이은 백색국가 배제는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 일 뿐 아니라 사실상 경제를 무기로 한 침략행위”로 규정했다.

따라서 송성환 의장 등 시·도의회 의장들은 앞으로 국민들의 불매운동 등 아베정권에 대한 대응활동을 지지하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역사교육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집행기구의 협의의 통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도교육청과 함께 역



전국시도의회협의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폐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사·인권·평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아베정부의 경제침략을 계기로 경제기초를 튼튼히 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존의 초석을 닦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의장들은 일본정부에 △백색국가 제외조치 철폐 △한국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 헌정질서 무시행위 중단 △양국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해결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 복귀 등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아파트 주차장 설치기준 현실화

정동영, ‘아파트 주차장 해소법’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9일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25년 만에 현실화하는 ‘아파트 주차장 해소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1년 425만대에서 2018년 2320만대로 5배 이상 증가했지만, 주차장 설치기준은 1996년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개정된 이래 23년째 유지되어 왔다”며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화하는 ‘아파트 주차장 해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차장 해소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현황과 ‘주차장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최근 1인 가구는 물론, 출퇴근용이나 장보기용 세컨드카를 구입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구당 많게는 2-3대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해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주차 분쟁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NPS 국민연금공단

이번달도 보냈다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보냅니다,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 평생 드립니다
살아가시는 동안 평생 연금을 지급합니다
- 올려 드립니다
물가가 오르면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매년 올라갑니다
- 혜택을 더 드립니다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더해드립니다
- 국가가 책임집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 지급을 약속합니다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콜센터 | 1355